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05두11272 종합체육시설업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이재철 외
피고, 상고인 안산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철준 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5. 8. 12. 선고 2004누26385 판결
판 결 선 고 2006. 3.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들은 2003. 7. 3. 피고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40-2 체육용지 8,264.4㎡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27,019.51㎡(2003. 11. 28. 연면적이 25,296.26㎡로 변경됨)의 운동시설(제1, 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그 판시의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후, 2004. 5. 27. 피고에게 종합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체육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본문 및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관시의 이 사건 종합체육시설업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4. 6. 30.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 2층 및 3층에 설치하고자 하는 목욕시설과 식당은 그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근린생활시설이고, 위 목욕시설과 식당의 면적을 합하면 부수용도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20%를 초과하여 지구단위계획상 도시설계시행지침 제99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법 제11조, 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당, 목욕시설, 매점 등(이하 ‘목욕시설 등’이라 한다) 임의적인 편의시설의 설치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의미는 위 운동시설에 적용되는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이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라는 취지이지 운동시설의 부대시설로 목욕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위 관계 법령에 따른 별도의 인·허가까지 받으라는 취지로는 해석되지 아니하고, 그 관시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2층 목욕시설과 1, 3층의 스넥코너 및 식당은 그 출입문 등의 구조로 인해 1층 수영장과 3층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등 운동시설의 이용객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위 운동시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부대시설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면적의 합계인 4,457.65㎡를 이 사건 건물의 부수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으로 보아 이 사건 건물 중 부수용도로 사용허가된 20%를 초과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당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 건축법(2000. 1. 28. 법률 제6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6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수립되었다가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부칙 제7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된 안산신도시 2단계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 제4조 및 제99조는 건물의 주용도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80% 이상을 사용하는 용도를 말하고, 건물의 부수용도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20% 미만을 사용하는 용도를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건물의 용도가 운동시설인 경우에는 주용도로는 운동시설, 부수용도로는 1, 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과 미관을 증진시키려는 위 각 규정의 입법 취지와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목욕시설 등이 지구단위계획상 주용도인 운동시설의 부대시설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그 목적과 기능이 운동시설의 용도 및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그 규모 역시 그러한 목적과 기능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설사 그 시설이 운동시설의 이용객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목욕시설의 면적은 목욕장, 이발소, 휴게실을 합하여 928㎡(탈의실 등 제외)로서 운동시설인 수영장의 총면적 893㎡을 오히려 상회하고, 식당 및 스낵코너의 면적 역시 675㎡에 이르고 있어서 그 규모가 이 사건 운동시설의 용도 및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 이 사건 목욕시설 등의 규모가 이 사건 운동시설의 용도 및 편의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초과한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이 사건 목욕시설 등이 운동시설의 부대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목욕시설 등이 이 사건 운동시설의 부대시설이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지구단위계획 제4조 및 제99조에 규정된 건물의 용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지형 _____

 대법관 강신욱 _____

주 심 대법관 고현철 _____

 대법관 양승태 _____